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정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해 양 경 찰 청

## 행 정 법

###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장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한 때, 경찰관은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2. 경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은 소극목적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적극목적적 행정작용인 복리행정(급부행정·규제행정 등)과 구분된다.
- ②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사법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법작용에 속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개괄적 수권 조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일반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질서행정도 오늘날 경찰에 속한다.

### 3.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②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 ②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 ③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④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5.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②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소에 한정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6. 의사의 진료행위거부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령의 직접적 효과이다.  
 나. 의사면허의 법률효과로 지는 의무이다.  
 다. 국가는 의사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라. 제3자는 의사의 진료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마. 병원장의 특별권력에 의거 부과되는 의무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공정력(예선택 효력)을 갖는다.  
 ② 위법하므로 당연히무효가 된다.  
 ③ 당해 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철회의 원인이 된다.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분할 경우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②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내용이 법률상으로는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9.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법치주의 붕괴,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해당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A가 정규임용 시에는 아무런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 시보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의 시보 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 후 정규임용 처분도 취소하였다.

- ①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② 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③ 시보임용처분에 근거한 정규임용처분은 무효이다.  
 ④ 시보임용처분은 당연히무효이다.

11. 다음 중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③ 긴급하지 않은 경우  
 ④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②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④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는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13.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② 재량행위에 법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③ 재량의 존재여부가 법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 ④ 재량은 법률효과에서 인정된다.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 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 ③ 기부채납인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私法)상 매매 등도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
- ④ 부담의 사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15.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흠의 승계
- ② 재송제기기간 및 불가쟁력의 발생
- ③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 ④ 위법성의 판단기준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 ②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 ③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히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 ④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17.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18.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무능력자가 행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인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 ④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9.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②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 ③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④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될 수 있다.

20.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 ③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 전의 토지 협의매수 계약
- ④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21.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장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몇몇 단행법률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명칭과 예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집행 - 무허가업소에 대한 폐쇄조치
- ② 집행벌 -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 ③ 직접강제 - 도로교통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 ④ 행정질서벌 - 과징금

23. 다음 중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수도법상의 단수처분<br>㉡세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영업의 인허가의 거부·정지<br>㉢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조치<br>㉣소방기본법에 의한 물건의 파괴<br>㉤마약중독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br>㉥국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br>㉦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br>㉧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부과금의 부과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하여야 한다.
- ③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④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근거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5.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과태료의 부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여기서의 서면에 포함된다.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에도 인정된다.
- ③ 통고처분이 행하여지더라도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다시 소추할 수 없다.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②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효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효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 ④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8.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가산세는 행정상 금전급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가산금은 성실한 납세신고와 같은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 ②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③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④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9.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 ③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한다.

30.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이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 ① 불가변력 ② 확정력 ③ 공정력 ④ 기속력

31. 최근 판례에 의할 때, 법률관계와 이를 다투는 소송 형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민사소송
- ②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 항고소송
- ③ 국가배상의 청구 - 항고소송
-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 - 항고소송

3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은 학문상 공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유무를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객관설이 종래의 판례 입장이다.
- ③ 안전성 결여에 관하여 관리자의 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하자의 존재 자체는 필요하다.
-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3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손실보상의 지급에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34.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 ③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제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제기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 국 제 법

1. 국제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아래 학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엘리네크(Jellinek)의 자기제한설
- ② 그로티우스(Grotius)의 자연법설
- ③ 뒤기(Duguit)의 법적 확신설
- ④ 켈젠(Kelsen)의 근본규범설

2.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지 재외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 ②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에서 ‘국내’의 의미는 재외국민의 본국을 의미한다.
- ③ 국적계속의 원칙에서 국적은 재외국민이 권리이익의 침해 시부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때까지 동일국적을 가져야 한다.
- ④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3.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의정서(protocol)
- ②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 ③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 ④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4. 외국인은 타국의 영역 내에 들어감으로써 원칙적으로 재류국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재류국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재류국의 외국인에게 과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재판을 받게 할 의무      ②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 ③ 납세의 의무      ④ 평시 방공활동의 의무

5.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②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일본, 미국, 프랑스는 국제법상 국가 분류에 있어서 단일국가이다.
- ② 단순한 영역·인구·국명 등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성과 동일성을 보전할 뿐 아니라, 정부의 변경에 의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서 존속한다는 원칙을 국가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③ 혁명·쿠데타 등 헌법에 위반하여 중앙정부를 전복시키고 성립한 사실상의 정부는 합헌적 절차에 의해 국가원수가 선출될 때까지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라고 한다.
- ④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같은 양자조약의 체결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7. 제3차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규정한 것으로 묶인 것은?

- ① 대륙붕, 군도수역,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 ② 대륙붕, 접속수역
- ③ 배타적 경제수역(EEZ), 군도수역, 통과통항권
- ④ 공해, 군도수역, 공해방지 강화, 분쟁해결제도화

8. 다음 중 국제법상 적법한 간섭으로서의 성격에 이견이 있는 것은?

- ①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적 간섭
- ② 조약에 의한 간섭
- ③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 ④ 자위를 위한 간섭

9. 다음 중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지역 내의 제한된 국가들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 ②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ICJ는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해야만 국제관습법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국제법에서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④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10.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가. 내수에 들어오지 않고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한 민사소송 차원의 강제집행  
 나. 접속수역에서 행하여진 외국선박의 밀입국 조력행위  
 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지 아니하는 대륙붕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낚시잡이 조업  
 라.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선박의 천연가스 시추행위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다, 라, 마

1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에 의한 항공기의 선상발진·착륙 또는 탑재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②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의 어로활동과 조사활동 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본다.  
 ④ 외국선박이 무기를 사용하여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12.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② 새로이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의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강행규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④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 아닌 것은?

- ① 교섭                              ② 국제심사  
 ③ 중재재판                      ④ 복구

14.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공해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별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이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중간선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④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보장된다.

1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의 존재 또는 입법의 불비(不備)를 원용할 수 있다.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 그 자체로는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왔다.  
 ④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항만으로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              |              |
|--------------|--------------|
| ㉠ 어업         | ㉡ 해양의 과학적 조사 |
| ㉢ 폐기물 투기의 규제 | ㉣ 인공섬의 설치    |
| ㉤ 석유의 채굴     | ㉥ 풍력발전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7.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들로만 연결된 것은?

- ① 위생 - 재정
- ② 관광 - 출입국관리
- ③ 출입국관리 - 어업
- ④ 관광 - 위생

18. 국가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제약은 그 국가를 타 국가의 법적 권한 하에 두지 않는 한, 독립된 국가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다. 영토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영토는 서로 접촉해 있어야 한다.  
라. 국민의 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마. 다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영토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주지에 대해서는 발견만으로도 완전한 권원을 취득한다.
- ② 오늘날에도 정복은 영토 취득의 권원으로 인정된다.
- ③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영유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④ 선점과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은 모두 실효적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20. 선점에 관한 판례나 사건이 아닌 것은?

- ① 1928년 팔마스섬 중재판결
- ② 1933년 PCIJ의 동부그린란드사건 판결
- ③ 1975년 ICJ의 서부사하라의 지위에 관한 권고적 의견
- ④ 1911년 미국, 멕시코간 차미잘 하천중재사건

21.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인이 여러 국가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먼저 인도를 청구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범 여부의 판단은 인도청구국이 한다.
- ③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 ④ 일반적으로 인도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 쌍방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규정은 UN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UN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 ② 국제기구는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 ③ ICJ의 재판관은 ICJ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④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23. 우리 헌법 제60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약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다. 우호통상항해조약  
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마. 강화조약  
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조항 수락국가의 증가
- ② 선결적 항변의 남용
- ③ 개인의 당사자 능력 부인
- ④ 상소제도의 부재





38. UN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 ③ 인권존중 원칙
- ④ 주권평등의 원칙

39.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해결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심사      ② 주선      ③ 협의      ④ 중개

40. 국제연합(U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UN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② 국제연합 총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③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회원국의 가입과 사무총장의 임명 등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 ④ 국제연합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